

##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현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각기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한·미·중 3국 관계는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하여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내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다.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피습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시 중국의 북한 편향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관계의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삼각관계 유형은 다시 양국결합 유형으로 회귀하였다.

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통일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여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중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나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 목 차

1.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
2. 전략적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3. 한·미·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4. 남·북·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 1.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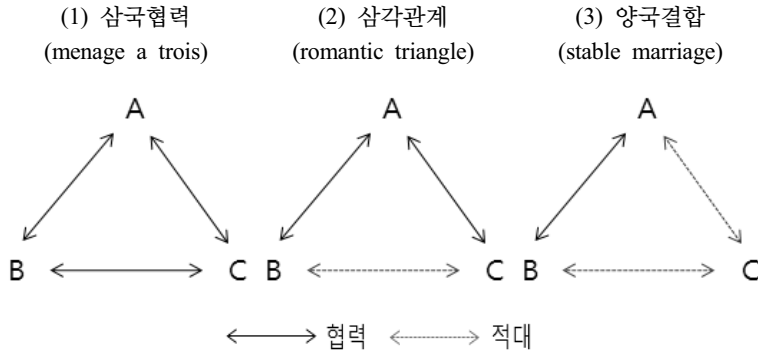
- 현재 한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임.
  - 한국·미국·중국 3국의 관계는 한국의 동북아전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한반도전략 차원에서는 한국·북한·중국 3국의 관계가 핵심임.
  - 한국·중국·일본의 3국 관계 관리는 상대적으로 차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미국·북한 3국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결속과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아직까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sup>1)</sup>
-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함.
  - 3국 간의 전략적 관계에서 일반적인 구조와 유형 그리고 작동원리는 무엇인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각각의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등이 본 글의 주요 관심사임.
- 이에 따라 본 글은 3국 간 전략적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개념적 고찰, 한·미·중 3국 관계와 남·북·중 3국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 그리고 각각의 3국 관계에서 한국 외교의 대응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함.

## 2. 전략적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가 자신의 논문 ‘The Strategic Triangle’을 통해 제시한 3국 관계 분석체계는 매우 유용함.<sup>2)</sup> 디트머는 ‘양자관계(bilateral relationship)’는 제3국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해져야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3국 관계(triangular relationship)’의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디트머는 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

(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고유의 작동원리를 갖고 있어 자신들이 처한 3국 관계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음(<그림 1> 참조).

〈그림 1〉 삼국관계(triangular relationship)의 세 가지 유형



- 삼국협력은 3개국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서 공존과 공영이 국제관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3국 관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삼국협력은 실제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움.
- 국가들은 자국(A)과 타국(B 또는 C) 간의 직접적 양자관계에 대해서는 내용과 방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타국(B)과 타국(C)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두 타국(B와 C)이 공모하여 자국(A)의 국가이익을 희생시키거나 심지어 침략을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항상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삼국협력은 상당히 불안정한 유형의 3국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삼각관계는 1개의 정점국가(A)를 향하여 2개의 국가들(B와 C)이 서로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는 유형의 3국 관계임. 즉, 정점국가 A는 B와 C 양국 모두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제공받거나 요청받는 반면에, B와 C는 A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상호 간 적대적 내지는 경쟁적 갈등을 보이는 유형임.
- 정점국가 A의 입장에서는 삼각관계가 삼국협력보다 훨씬 유리함. 삼국협력은 불안정성이 심하지만 삼각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삼국협력은 3개국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서 공존과 공영이 국제관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3국 관계라고 할 수 있음.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삼국 협력은 실제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움**

**3국 관계에서 각 개별 국가의 혜택 또는 이익은 삼각관계의 정점국가 가장 크고 이어 양국결합의 선임동맹국, 양국결합의 동맹국, 삼각관계의 구애국, 양국결합의 배제국 순으로 그 크기를 배열할 수 있음**

- 고 가장 우월한 혜택(B와 C 모두와 우호적 관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삼각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점국가 A의 각별한 관리 능력이 필요함. A는 B와 C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공평하게 유지하면서도 B와 C 간의 갈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속되도록 해야 함. 그래야만 A가 자신의 정점국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음.
  - A가 B에게 과도한 애정을 보내거나 또는 그렇게 비쳐질 경우 C는 A에 대한 구애를 포기하고 독자노선을 걷거나 A에 대한 적대국가로 변할 것임. 또한 B와 C 간의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될 경우 A는 B와 C 모두로부터 ‘최후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A는 어쩔 수 없이 B와 C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서 정점국가의 위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반면에 B와 C 간의 갈등이 크게 완화되어 B와 C의 양자관계가 긴밀해질 경우 A는 B와 C의 공모위협에 노출되면서 정점국가의 위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양국결합은 2개의 국가들(A와 B)이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의 국가(C)와는 두 국가 모두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의 3국 관계임. 즉, A와 B는 상호우호를 유지하면서 C만 소외시키는 유형임.
- 양국결합은 우호관계가 단 1개(A와 B의 양자관계)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 3국 관계 유형 중 전체적으로는 가장 작은 혜택을 발생시키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 A와 B 두 국가 간의 우호관계만 관리된다면 양국결합 유형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임.
  - 양국결합 유형의 3국 관계에서 C는 두 가지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음. 즉, A와 B 모두와 적대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거나, A 또는 B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돌파하는 것임. 특히 A와 B 간의 우호관계가 비대칭적(예를 들어, 우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A가 B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이라면, C는 B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A와 B 간의 우호관계를 와해시키면서 현재의 ‘공공의 적(public enemy)’ 위치를 탈피하려고 할 것임.
  - A와 B 또한 각기 내부적으로는 C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금의 양국결합 구조를 자신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음. 그 어떤 유형의 3국 관계보다도 삼각관계에서의 정점국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임.
- 3국 관계에서 각 개별국가의 혜택 또는 이익은 삼각관계의 정점국가

가 가장 크고 이어 양국결합의 선입동맹국, 양국결합의 동맹국, 삼각관계의 구애국, 양국결합의 배제국 순으로 그 크기를 배열할 수 있음.

- 삼국협력을 구성하는 국가는 경우에 따라 삼각관계의 정점국가보다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삼국협력 유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음.

### 3. 한·미·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 상기의 논의를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에 대입하면 그 구조와 작동원리가 분명히 드러남. 먼저 한·미·중 3국 관계의 경우,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음.
  - 중국은 적대국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음.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고, ‘중국 거대시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삼각관계의 정점국가가 되고자 하였음.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끌어들이므로써 양국결합의 선입동맹국 위치에서 삼각관계의 정점국가로 올라서고자 하였음. 즉,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삼각관계의 정점국가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음.
  - 한국은 양국결합 구조의 동맹국으로서 양국결합의 안정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접근을 받아들였음. 양국결합 구조에서 얻지 못하는 혜택(중국시장 확보와 남북관계 개선)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였음. 아울러 양국결합 구조가 삼국협력 구조로 전환되기를 내심 기대하였음. 한국이 현재의 국력으로는 삼각관계의 정점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삼국협력 구조가 구조 변환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임.
-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
  -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한 미국은 한·미·중 3국 관계를 삼각관계 유형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양국결합 유형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 시작했음. 이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삼각관계에서의 구애국가가 아니라 정점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임.
  - 삼국협력 구조 또한 창출되지 못하였음. 동북아 지역내 질서의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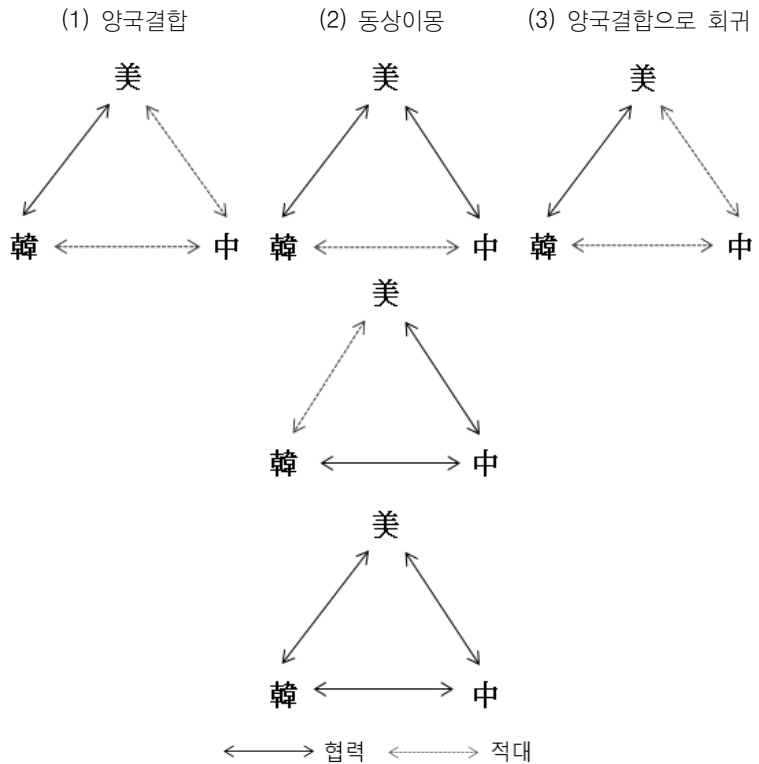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한 미국은 한·미·중 3국 관계를 삼각관계 유형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양국결합 유형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삼각관계에서의 구애국가가 아니라 정점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임**

**미국의 정책회귀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은  
독자노선 추진과  
동맹국 접근이라는  
두 전략의 혼용으로  
나타났음. 즉 중국은  
독자노선의 일환으로서  
한·미·중 3국 관계의  
밖에 있는 북한을  
활용하기 시작했음**

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본질적으로는 ‘영합게임 (zero-sum game)’이기 때문임.

- 미국은 다시금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붙들어 매기 시작했음. 천안함 피습 침몰 사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동맹 확인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양국결합 구조의 공고화였음.
- 미국의 정책회귀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은 독자노선 추진과 동맹국(B) 접근이라는 두 전략의 혼용으로 나타났음. 즉, 중국은 독자노선의 일환으로서 한·미·중 3국 관계의 밖에 있는 북한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음. 중국은 북중동맹을 다시금 챙기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양국결합 구조의 공고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였음. 또한 중국은 동맹국 접근 전략도 버리지 않았음. 중국은 한국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구애를 보내고 있음. 이는 양국결합 구조에서 배제국 C의 전형적인 양면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 한·미·중 삼국관계



- 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함.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삼국협력 구조를 창출하고 이를 최소한 한반도 통일의 시점을 전후해서만이라도 유지시켜야 함.
- 한국은 또한 한·미·중 3국 관계의 특정 영역에서는 삼각관계 유형에서의 정점국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즉, 한·미·중 3국 관계를 하나로 인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3국 관계를 영역별로 쪼개고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하위 3국 관계들(sub-triangular relationships)’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함. 군사나 안보 분야는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삼국협력 구조나 한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전략의 탄착점이 바로 이 지점임.
  - 한·미·중 3국 관계의 영역별 세분화와 다양한 유형의 하위 3국 관계 창출 전략은 한국이 영역에 따라서는 정점국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공간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영역 간의 교류와 교환을 통해 한·미·중 3국 관계 전체를 보다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즉, 하위 3국 관계들의 양적 팽창을 통해 전체(또는 상위) 3국 관계의 질적 변환을 도모할 수 있음.
- 한국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 노력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공모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미국의 의심은 동맹 포기과 한국 방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국가이익의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양국결합 구조에서의 동맹국 위치가 삼각관계 구조의 구애국 또는 양국결합 구조의 배제국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임. 결국 한국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발판으로 미래의 새로운 한·미·중 3국 관계를 열어야 함.

**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함.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4. 남·북·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 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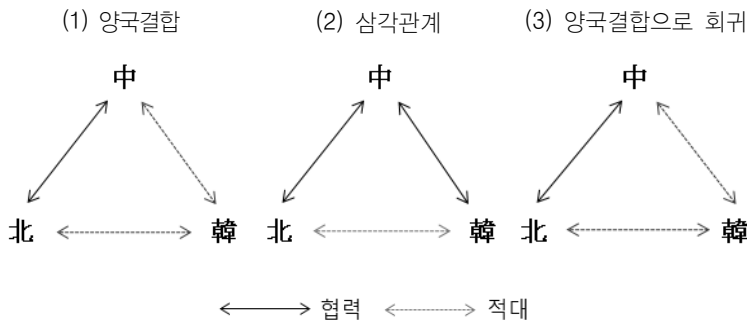
**중국이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면서부터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정점국가 전략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기  
시작했음**

- 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음. 그러나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음.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
- 한중수교는 3국 관계 구조 전환의 시발점이었음. 한국의 경제성장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대비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 또한 한중수교의 동인으로 작용하였음.
  - 중국은 기존의 양국결합 구조를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3국 관계에서의 배가된 혜택(한국과 북한 모두와의 우호관계 유지)을 얻고자 하였음. 즉, 중국은 양국결합 구조의 선임동맹국에서 삼각관계 구조의 정점국가로 상승하였음.
  - 한국 또한 양국결합 구조의 배제국가에서 삼각관계 구조의 구애국가로 한 단계 더 나아감.
  - 이에 반해 북한은 양국결합 구조의 동맹국 위치에서 삼각관계 구조의 구애국가 중 하나로 한 단계 전략하였음.
- 중국이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면서부터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정점국가 전략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음.
- 중국은 북한과의 양국 관계가 한미관계와 같은 군사동맹이 아니고 국가 대(對) 국가의 정상적 관계라고 여러 차례 천명을 하였음. 이는 한국을 구애국가로서 붙들어 두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즉, 북·중 양국 관계의 군사동맹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구애행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임. 중국이 지속적으로 정점국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 수 없음.
  - 중국은 또한 공식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북한의 적당한 갈등이 지속되기를 바래왔음. 한국과 북한 간의 급격한 접근과 밀착은 중국에 있어서는 정점국가의 위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임.
  - 중국은 한국과 북한 간의 갈등 악화도 바라지 않음. 한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국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며, 한국과 북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중국의 정점국가 위치는 사라지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3월의 천안함 피습 침몰 사건은 중국에도

커다란 전략적 타격이었음.

- 중국은 사건 초기 ‘한반도의 불안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과 북한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였음. 중국은 정점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또 국제문제로 확대되자 중국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며 결국 사실상 북한을 선택하였음. 그 순간 중국이 애써 추진하였던 삼각관계 구조는 다시 양국결합 구조로 회귀하였음.
  - 중국은 삼각관계 구조의 정점국가에서 양국결합 구조의 선임동맹국으로 다시 후퇴하였으며 한국 또한 삼각관계 구조의 구애국가에서 양국결합 구조의 배제국가로 떨어졌음. 중국과 한국 모두 전략적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북한은 전략적 성공을 거두었음. 삼각관계 구조의 구애국가 중 하나에서 다시금 양국결합 구조의 동맹국가로 올라섰기 때문임.
- 한중수교 이후 북한은 북중동맹의 회복을 노려왔음. 물론 초기에는 선군정치와 핵개발 등을 통해 자력갱생이라는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중국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삼각관계 구조를 다시 과거의 양국결합 구조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였음.
- 천안함을 가격한 어뢰 1발은 북한의 외교적 숙원을 해결해 주었음. 즉, 북한은 다시금 양국결합 구조의 동맹국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3〉 남·북·중 삼국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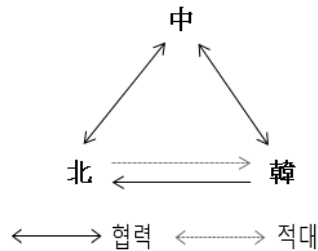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또 국제문제로 확대되자  
중국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며 결국 사실상  
북한을 선택하였음.  
그 순간 중국이 애써  
추진하였던  
삼각관계 구조는 다시  
양국결합 구조로  
회귀하였음**

**한국의 북한에 대한  
협력시도가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을지라도  
한국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조응  
(reciprocation)은  
본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삼각관계 구조에서 한국과 북한관계는 보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개념적으로는 삼각관계 구조의 구애국들 상호 간에는 경쟁 및 갈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이러한 체계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였음.
  - 1992년 한중수교부터 1999년까지의 남북관계는 상호 경쟁 및 갈등 시기로 해석할 수 있으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8년 초까지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 협력을 시도하는 반면에 북한은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은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개혁·개방을 향한 가치적인 변화는 도출하지 못하였음. 오히려 북한은 핵개발을 고수하면서 대남 호전성을 버리지 않았음. 즉, 협력 또는 적대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 협력과 일방 적대가 양국 간 교차되는 양상이 나타났음.
  - 한국의 북한에 대한 협력시도가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을지라도 한국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조응(reciprocation)은 본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림 4〉 협력과 적대의 불일치



-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의 전략 목표는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켜서 (1) 중국에 대한 구애 경쟁에서 북한을 누르거나, (2)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나, (3)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내는 것임.
  - 삼각관계 구조로 다시 전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음.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는 한국·중국·북한 3국 중 북한만이 원하는 구도임.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선택하면서 정점국가로서의 위치를 버렸지만 삼각관계 구조로의 재진입을 바라고 있음.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적정수준에서 봉합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음.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이 필요한 국가이며 아울러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음. 한국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함.

- 한국은 우선 정점국가 위상 재확보를 원하는 중국과 양국결합 구조 지속을 바라는 북한과의 전략적 이해관계 불일치를 최대한 드러내고 확대해야 함. 한국은 천안함 사건에서의 중국에 대한 앙금을 가슴에 묻어두고, 한중 협력관계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중 3국 관계를 삼각관계 구조로 재진입해야 함.
- 삼각관계 구조가 다시 형성될 경우, 한국의 첫 번째 전략은 북한과의 구애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면서 북한을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임. 즉, 중국의 한국 선택과 더불어 북중동맹의 해체가 목표가 되어야 함.
- 북한의 중력중심이자 생명줄은 북중동맹임. 한국은 이 사슬을 끊어 내야 함. 중국이 포기한 북한이 중국이 관리하는 북한보다 한반도의 통일기회 확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에 더 부합함.
- 북중동맹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어 한국이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여져야 함.
- 현재 중국은 기존의 ‘한반도 통일위협론’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 이론’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sup>3)</sup> ‘한반도 통일이론’은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라면 지금의 분단상황보다는 통일 상황이 ‘화평발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임.
  - 중국은 아직까지는 통일 한반도에 출현하게 될 국가의 성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단은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대(對)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음.
  - 한국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 시켜야 함. 부유한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가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함. 한국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대(對)북 기득권을 존중할 것임을 사전에 천명해야 함. 현(現) 북·중 국경선의 인정과 고토회 북정책 포기, 북·중 간 체결된 각종 사업협약의 계승,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임을 명백히 선언, 북한지역 경제재건에의 참여기회 보장

**삼각관계 구조가 다시  
형성될 경우, 한국의  
첫 번째 전략은  
북한과의 구애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면서  
북한을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임**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對)중국 구애경쟁에 있어 군사·안보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될 경우 한국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짐**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함. 북한의 체제전환은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득해야 함.<sup>4)</sup> 북한은 ‘완충지대(buffer zone)’가 아니라 중국의 쾌속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속도방지도로(bumpy road)’임을 역설해야 함.

-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對)중국 구애경쟁에 있어 군사·안보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될 경우 한국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짐.
  - 한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원하는 결정적인 양보를 할 경우 북한과의 경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음. 중국이 원하는 결정적인 양보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친중 내지는 중립적 국가가 되는 것이며 이를 구조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 여기서부터는 남·북·중 3국 관계와 한·미·중 3국 관계가 상호 중첩되어 진행되는 복합게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한국이 한미 동맹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가 무엇인지는 남·북·중 3국 관계와 한·미·중 3국 관계의 교집합에서 찾아야 함. 즉, 한미동맹의 근간 위에서 중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지점을 밝혀내고 개발해야 함. 미·중 협력 관계의 구축은 이러한 교집합 찾기의 선결 요건임.
- 한국의 두 번째 전략은 남·북·중 3국 관계를 삼각관계 구조에서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임. 즉, 중국을 대상으로 한국과 북한이 상호 갈등하면서 경쟁적으로 구애하는 형태를 벗어나 한국·중국·북한 3국 모두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삼국협력 구조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점 국가로서 누리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3국 간의 협력 시너지는 전체의 합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임.
  - 첫 번째 전략에서처럼 중국이 한국과 북한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를 겪을 필요도 없고, 한국 또한 한미동맹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 북한도 국가소멸의 위험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됨.
  - 현재 중국이 동북 3성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북·중 접경 지역 공동개발이 삼국협력 구조로의 전환기초가 될 수 있음. 즉, 북·중 공동개발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임.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쳐질 경우,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남·북·중 3국 관계는 삼국협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삼국협력으로의 발전 전략은 북한의 폐쇄성과 대(對)남 경계정책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음. 또한 이 전략은 자칫 북한체제의 불필요한 연명과 존속을 가져와 한반도 통일기회를 무산시키면서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음.
- 한국의 세 번째 전략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구애 경쟁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삼각관계 구조를 한국과 북한의 양국결합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임. 한국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정권과 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통일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한국은 곧바로 이 전략을 채택해야 함.

**중국이 동북 3성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북·중 접경 지역 공동개발에 한국이 참여하여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쳐질 경우,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남·북·중 3국 관계는 삼국협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 저자 약력

---

### ■ 김동성

現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저서로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등이 있음.

## 주석

---

\* 본 글은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한울, 2011)에서 발췌한 것임.

- 1) 한국, 미국, 북한 3국의 전략적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서보혁의 논문을, 북한, 미국, 중국 3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숙의 논문을, 동북아 6개국 전체의 상호 간 우적관계 인식도에 대해서는 김재한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음.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세종연구소, 2008), pp.63-85;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pp.129-148; 김재한, “동북아시아 우적관계의 구조”, 『국방연구』, 제52권 제3호, (국방대학교, 2009), pp.67-99.
- 2)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July 1981), pp.485-515.
- 3)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JPI 정책포럼』, 2009-19, (제주평화연구원, 2009), pp.1-14.
- 4) 최명해, “중국의 대북한정책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군비통제자료 47, 2010), pp.139-160.

## JPI 정책포럼 현황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중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2010년 3월)
- 이영훈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3월)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2010년 3월)
- 문흥호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2010년 2월)
- 조성렬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2010년 2월)
- 이종서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2010년 1월)
- 박병광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함의』 (2010년 1월)
-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2010년 1월)





#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mailto: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